

원유대란 우려... 근본대책 찾아야

구제역으로 인한 젖소 살처분 두수 증가로 인해 원유 생산기반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원유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쿼터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낙농진흥회는 원유부족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9년 폐지했던 버퍼제도를 2년 만에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반 유업체들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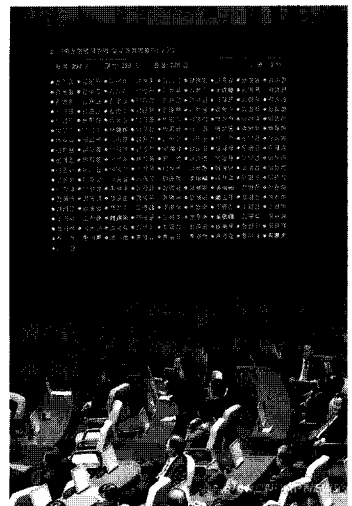
하지만 사료값 상승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낙농가들이 기존 원유량도 못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쿼터조정의 실효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원유부족사태는 낙농가들의 생산의욕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이며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당한 일부 농가들이 낙농업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경우 원유생산기반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낙농가들은 낙농기반을 유지하고 원유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 원유가격 인상을 비롯해 근본적인 낙농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의 한 낙농가는 “대부분의 낙농가들이 사료가격은 물론, 제반경비 상승으로 인해 기준원유량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순히 쿼터량 조정 등으로 낙농가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는 어려울 것”이라며 낙농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낙농가는 “지금 당장은 학교 방학 등으로 인해 우유소비 비수기로 버티고 있지만 개학하면 원유부족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구제역이 진정된 이후에는 유업체들간 원유확보 전쟁까지 벌어질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루속히 낙농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낙농진흥회는 지난 2009년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개선하면서 정상원유가격의 70%를 지급하던 초과물량을 없애면서 6%의 버퍼물량을 기준원유량으로 전환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 가축법 개정안 처리

국회는 지난 1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작년말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 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민주당이 가축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한나라당의 본회의 소집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가축 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할 때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검사·소독을 받도록 했다.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이들이 가축 전염병을 발생·전파시킨 경우에는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가축 전염병에 대한 확산방지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지원토록 하는 근거 조항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작년 12월 22일 여야 합의로 가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민주당이 구제역 예방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재심의를 들어가 1월 12일 최종 대안을 의결했다.

상한 '농심 들깨기법'.. 송광호, 낙농진흥법 개정안 발의

전국적인 구제역 파동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송광호 한나라당 의원이 축산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한 낙농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1월 1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낙농가가 낙농도우미제도를 이용하면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낙농 도우미제도란 불가피하게 목장을 일시적으로 비우면 위탁 관리를 해주는 제도.

매일 우유를 짜 줘야 하고 사료급여 횟수가 많아 한시도 목장을 비울 수 없는 낙농업의 특성상 영세농가는 노동피로도가 높고 개인 여가생활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민간업체들과 낙농조합의 주도로 실시됐다. 하지만 지역별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지역실정에 맞추어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치단체 소속 낙농가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영세 낙농가는 경제적 부담도 컸다. 개정안은 낙농진흥계획에 낙농도우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낙농도우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낙농도우미 이용 지원비용으로 2011년 26억원 등 5년 간 총 117억원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서울우유조합에 따르면 농가당 이용일수는 평균 18~25일일었고 2011년 기준으로 1,500여 낙농가에서 25일씩 낙농도우미를 이용하면 필요한 낙농도우미의 수는 100여 명이었다.

원유생산 감소로 분유재고 역대 최저

원유부족사태 장기화로 인해 분유재고량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유가공협회(회장 이규태)는 12월 중 분유재고량은 적정재고에 훨씬 못 미치는 1천톤 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분유재고량은 전지분유 96톤과 탈지분유 1천492톤 등 총 1천588톤이었으나, 12월에는 구제역으로 인해 폐기처분된 원유가 많아 재고량은 더욱 줄어들어 1천톤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분유재고량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까지의 적정재고량으로 추정되는 5천톤 내외를 유지했지만 7월 이후부터는 매달 1천톤씩 줄어들고 있다. 7월 중 4천톤대로 하락했던 분유재고량은 8월에는 3천톤으로 9월에는 2천400톤대로 10월에는 2천톤대가 무너져 1천999톤을 기록했다. 이처럼 분유재고량이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연초부터 발생한 구제역을 비롯해 흑한, 흑서 등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원유생산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유가공협회 한 관계자는 "유제품을 생산하고 남는 원유물량으로 어쩔 수 없이 분유를 생산할 수 밖에 없다"며 "국내 적정 분유재고량은 5천톤 내외로 보는데 재고량이 1천톤 내외라면 재고가 거의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유재고량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구제역을 비롯해 흑한과 흑서 등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원유생산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최근 구제역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젖소 살처분 두수가 증가해 원유 부족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살처분 명령 불이행시 보상금 삭감

구제역 살처분 명령 불이행시 보상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농가들의 주의를 요구된다. 최근 일부 농가가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방역 당국에서는 이들 농가들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신고와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이 중요한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차등지급해서라도 협조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매몰지를 확보하지 못해 시간이 지연되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는 농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신속한 살처분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방역에도 그 만큼 허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살처분 명령 위반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살처분 보상금 삭감(최소 20%이상)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방역당국은 대부분 농가들이 살처분 명령 미이행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농가에 대한 홍보·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쿼터 상향조정 · 연간총량제 도입기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원유부족 사태가 구제역으로 인해 장기화되자 쿼터상향 조정, 연간총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우유수급안정 대책을 내놴다. 또 재고량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분유의 공급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로 적용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농식품부의 이런 조치는 그동안 우유의 경우 농가별로 생산량을 기준원유량(쿼터제)을 통해 수급을 조절해 왔는데, 최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젖소가 줄어들고 우유 생산량도 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들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기준원유량을 5% 증량하고 일반 유업체의 경우 이미 쿼터를 증량했거나 증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쿼터산정방법도 현행 15일에서 연간으로 계산하는 '연간총량쿼터제'로 전환키로 했다. 연간총량쿼터제가 도입되면 향후 농가들이 정상우유가격을 받을 수 있는 쿼터량을 맞추기

가 용이해져 보다 적극적으로 우유 생산을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 쿼터제는 젖소의 특성상 계절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 쿼터량을 일정하게 맞추기가 어려운 반면, 쿼터를 초과하게 되면 정상 우유가격의 절반 정도의 값을 받기 때문에 우유 증산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연간총량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또 최근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세에 있는 탈지분유와 전지분유를 할당관세로 적용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장기적으로 우유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낙농가들의 규모화, 젖소개량, 낙농단지 및 젖소육성우 전문목장 조성, 후계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낙농육우협회는 "목장경영 비상상황에서 정부도 위기감을 느껴 부족하지만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낙농가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료값 폭등 대책,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목장원유가 현실화 등을 준비해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협회는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전국단위 제도 개편, 생산자위원회 설치 및 낙농조합 집유일원화를 위한 낙농진흥법 개정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구제역 피해농가들에 대해 젖소 살처분보상금 체계 개선, 유대보상기간 연장(최소 1년으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